

주간 통일정세

2015-42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조선, 서해상에서 우리 경비정에 포사격”(10/25,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24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서해상 우리측 수역에서 정상적인 해상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경비정을 향해 북방한계선 접근이니 경고니 하며 마구 불질을 해대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된 이번 포사격 망동은 침예한 조선 서해 수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켜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격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함.
 - 특히 “최근 군부 우두머리들이 연평도 등 최전연 일대를 싸다니며 ‘단호한 응징’을 떠들어대고 미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각종 북침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벌어진 데 대해 더욱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 대변인은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이산가족 상봉도 언급하며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 분위기를 망쳐놓고 북남 합의 이행 과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감행된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한미 공동성명에 “광대극”...“핵무력은 보검”(10/19,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9일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가 비린칭(비위에 거슬리는 목청)을 돋우어댄 박근혜와 맞장구쳐준 오바마의 추한 행실은 삼살개와 미친개의 가증스러운 낯짝을 연상시킨다”며 핏대를 세움.
 - 신문은 또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라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도 19일 “남조선 집권자의 이번 미국 행각은 친미시대 매국행각,

동족대결 구걸행각”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큰길로”(10/22, 조선신보)
 - 통일신보는 22일 ‘상봉의 기쁨을 관계개선의 더 큰 길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 합의에 따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진행됐다”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치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함.
 - 이어 “6·15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지금까지 이뤄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공화국의 인내성 있는 노력과 때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외세에 강요된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며 상봉의 기쁨을 안겨주려는 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북과 남은 이번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화해 정신을 즐기차게 이어 관계개선의 풍성한 가을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남측 국회의원·보좌관 PC 해킹 부인(10/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군사분계선(DMZ) 지뢰 폭발 도발과 관련해 북측 선동 지령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비난함.
 - 또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북의 지뢰폭발 및 포격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모략극인가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쓰고 벌린 ‘진상조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드러났다”고 주장함.
 - 이어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걸고 드는 모략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남조선 정보원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지금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뒤집어엎고 제2의 8월 위기를 몰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언론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잇달아 보도(10/20, 조선중앙통신 10/2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1일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시작’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0일 우리측 상봉자들은 남녘의 가족, 친척들과 집체(단체) 상봉을 하였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어 “상봉 장소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속에 수십년 세월 생사조차 알길 없어 마음속으로만 그려보던 혈육들을 만나게 된 기쁨과 통일의 열망으로 설레이었다”고 소개함.
 - 조선중앙방송도 21일 전날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뜨거운 동포애에 의해서 마련된 북남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은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함.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0일에도 “우리측 상봉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하여 남녘의 혈육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상봉 소식을 전함.
- 조선신보, 이산가족 1차 상봉 상세히 보도(10/24, 조선신보)
 - 2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 대해 조선신보는 이산가족 상봉이 “1년8개월만에 이루어졌다”며 “‘반갑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가족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부둥켜안고 쌓이고 쌓인 회포를 풀었다”고 전함.
 - 1차 상봉 마지막 날인 22일에 있는 작별상봉과 관련해 조선신보는 “20일부터 2박 3일간에 걸쳐 진행된 흩어진 가족, 친척 제1차 상봉 행사가 22일 끝났다”고 보도함.

- <이산상봉> 북한 상봉단장 “상시접촉·편지교환 협의할 것”(10/25, 연합뉴스)
 - 리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회의 환영 만찬 직후 취재단과 만나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남측과)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그는 “이러한 내용은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남측 김성주 총재와도 많은 내용을 협의했다”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그는 앞서 만찬사에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 적십자단체들은 갈라진 민족의 아픔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적십자 사업의 본도에 맞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이번 상봉은 지난 8월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합의의 성과적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대결과 불신은 민족번영의 장애물임을 똑똑히 깨달은 우리 겨레에게 누구나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일구월심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임.

- 우리 군의 2015 호국훈련(10.19-30)·화랑훈련(10.19-22)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시기에 군부 호전광들의 발광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고 또다시 대결시대를 몰아오려는 위험한 기도’라고 비난(10.19, 중앙통신)
- 대통령의 미국 순방 관련 ‘정치근시안의 사대매국, 동족대결 행각’이라며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민족을 혈투는 정치근시안이 받을 대접이란 민족의 반역아라는 가장 추악한 대명사 뿐’이라고 비난(10.21, 중앙통신)
- ‘남조선 당국이 외세를 등에 업고 강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압박공조 놀음은 공화국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이며 북남사이의 관계개선 기회를 파산시키기 위한 불순한 모략’이라며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라고 비난(10.21)
- 우리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남조선 사회를 암흑의 시대로 되돌리고 북남 관계를 영원히 말아먹는 극악한 민족반역행위”라고 중단 주장(10.22, 중앙통신)
- 우리 대통령의 ‘北 핵문제 지적(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등)’을 “북 핵문제를 걸고 국제적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무장해제한 다음 압살하자는데 있다”고 실명 비난(10.22)

- 한일 국방장관 회담 발언(우리 측 : 자위대 북 지역 진입시 사전 동의, 일본 측 : 한국의 유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 관련 ‘가소롭기 짝이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공염불’이라며 ‘북 지역 진입을 망상하며 전쟁소동에 광분하는 자들은 저들의 망동이 한반도와 북남관계에 끼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주장(10.24,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우리 해군 관함식 해상사열과 훈련시범 참가 관련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라며 ‘미제와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에 의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고 비난(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 입항 및 韓日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남한 당국이 남북합의 이행, 대화와 관계개선을 추동할 의지가 있다면 외세와 공모결탁 하는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할 것’을 주장(10.25)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부산항 입항에 강력 반발(10/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이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를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들과 함께 부산 앞바다에 들이밀어 남조선 해군과의 대규모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또 “이것은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우리는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중대제안을 내놓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가중되는 군사적 도발로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면서도 아직도 비핵화가 우선순위라고 우기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상강도의 논리와 같은 억지이고 궤변”이라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사건을 조작해 대결을 추구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무모한 군사적 망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예측할 수 없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 북남관계는 또다시 8월 합의 이전의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위협함.
 -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 깡패들이 조국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여 분별을 잃고 날치는 한 북남관계 개선은커녕 전쟁의 참화 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경고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조선신보 “북한, 미국에 신뢰 기초한 평화수립 바란다”(10/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9일 ‘조선의 평화공세, 검증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전날 북한 외무성이 성명에서 미국에 적대정책 포기와 평화협정 체결의 신뢰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 수립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힘.
 -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이 이란과 다르겠지만 “평화협정 체결을 앞세워 나가야만 조미 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8월의 북남 합의 이후 조선이 벌이는 대미 평화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검증된다”고 지적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미국 “北과 평화협정 논의 관심없어…병진노선 포기 전방위압박”(10/21, 연합뉴스)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대표는 20일 밤 코커(공화 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할 경우 우선적 초점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 “협상의 목표가 비핵화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며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함.

- 미국 정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정례 검토”(10/23, 연합뉴스)
 -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함.

마. 대중국

- 북한, 중국의 6·25전쟁 참전 65주년 맞아 ‘혈맹’ 강조(10/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전쟁에서 과시된 조중 인민의 전투적 우의’란 제목의 글에서 “피어린 항일 대전의 불길 속에서 맺어진 조중 인민의 친선은 지난 조선전쟁 시기에 전투적 우의로써 힘있게 과시됐다”고 강조함.
 - 통신은 6·25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인민군과 함께 “개천지구를 비롯한 청천강반과 장진호반에서 대격전을 벌려 제국주의 연합부대를 전멸의 운명에 몰아넣는 등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했다”고 높이 평가함.
 - 통신은 “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평양의 모란봉 기슭에 우의탑을 세우고 회창, 운산, 개천, 장진, 개성 그리고 상감령과 금성천 기슭 등 여러 곳에 지원군 열사 능원과 열사묘들을 꾸려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위훈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임.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 김일성대 총장, 러시아 극동연방대 방문 (10/20, 자유아시아방송)

- 대형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이 이끄는 김일성대 대표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를 방문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극동연방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철 총장을 비롯한 김일성대 대표단이 지난 16~19일 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밝혔으며 세르게이 이바네츠 극동연방대 총장이 김일성대 대표단을 만나 교육과정과 특성, 캠퍼스 개발 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실내의 체육시설 견학에도 동행했다고 전함.
- 러시아는 북한 총영사관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할 경우 후보지로 도심에 위치한 옛 극동연방대 건물과 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이 이번 대표단 파견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거점 공관인 연해주 나훗카 총영사관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아. 국제기구

- 북한, EU 인권특별대표 10월 방북 초청했으나 불발(10/23, 미국의소리)
 - 유럽연합(EU) 대변인은 23일 “북한이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 대표에게 이번 달에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으나 인권특별 대표의 방북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했던 전권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으나 EU 대변인은 “방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함.
- 반기문 '북한인권상황보고서' 유엔총회에 제출(10/23,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22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반 총장이 유엔총회에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았으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주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영국서 북한인권 조사(10/25,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영국 등 유럽에서 탈북자 단체를 통한 북한 인권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타렉 세니티 부소장이 이끄는 조사단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탈북자 단체인 재영조선인협회 임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의 영국 정착 실태, 언어소통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눔.
- 조사단은 또 국제사면위원회, 세계기독교연대, 북한인권을 위한 유럽동맹 등 여러 국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를 만나 회의하는 등 유럽에서 북한 인권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베트남 인민군 대표단, 북한 방문(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웬 쩡 응이아 총정치국 부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이 19일 평양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연합뉴스는 대표단의 방북 목적에 대해 전해지지 않았으나 북한과 베트남 군은 해마다 상호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친선을 다지고 있어 이번 방북도 친선 교류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함.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19일 재일본조선인 축하단(단장 : 남승우 「총련」 부의장) 면담(10.19,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北-美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며 ‘미국이 우리(北)의 제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세계 앞에서 검증받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주장(10.21,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총기사건을 거론하며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며 성행하는 미국의 총기류 범죄현상은 미국 정치인들 자신이 몰아온 비극’이라며 ‘미국은 남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10.21,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1일 주북 인도 대사(자스 민다르 카스투리아) 신임장 접수 및 담화(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독일-조선의원단 대표단(단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위원장)과 담화(10.21, 중앙통신)
- 박영식(인민무력부장), 10월 21일 베트남 인민군 정치일꾼대표단(단장 : 웬 쩡 응이아 총정치국 부주임)과 담화(10.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이 제출한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난징대학살 부인 및 유네스코 분담금 삭감 언급 등 철면피한 행동’ 비난 및 ‘과거청산’ 촉구(10.22,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22일 베트남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과 담화 및 럽철성(육군 중장)·주북 베트남 대사(팜 비엣 흥) 등 배석(10.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은 현재 원자탄 제조기술을 구비하고 단기간 내에 핵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일본의 급속한 핵무장화 움직임에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10.24, 중앙통신)
- ‘미국이 진실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바란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北)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나서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외면하고 끝내 다른 길을 고집하는 경우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혁명적 무장력과 마주치게 되는 길밖에 없다’고 위협(10.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유엔 창립(10.24) 70주년을 맞아 ‘유엔은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는 도구로 되지 말아야 한다’며 ‘유엔은 하루빨리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에서 벗어나 성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한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10.24, 중앙통신·노동신문)
- 독일-조선의원단 대표단(단장 : 하르트무트 코쉬크 위원장), 주체사상탑과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 참관(10.24,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무부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미국 권고안(미군의 해외배치 중단 등)’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는 “허황한 보고서”라고 ‘미국의 국내외 인권문제(이라크 전쟁·인종차별 등)’ 비난(10.25)
-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10.25) 65주년 즈음 “조종인민의 친선은 조선전쟁시기에 전투적 의의로써 과시되었다”며 ‘北-中 혈맹관계’ 강조(10.25, 중앙통신)
- 주북 외교단 체육경기, 10월 25일 3일간 일정(축구·배구·유희오락경기 및 시상식, 민족음식품평회 진행) 종료(10.25,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청봉악단·모란봉악단 기념공연 관람(10/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청봉악단과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청봉악단 공연 관람에 김기남·최룡해·김양건 당 비서와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청봉악단 공연과는 별개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 공연도 관람했으며 최룡해·김양건 당 비서와 당 창건 70주년 경축 1만명 대공연 참가자들도 공연을 관람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연을 관람한 뒤 “창작가와 예술인들이 시대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치하함.

- 북한 김정은, 완공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시찰(10/2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를 시찰했다고 전하며 시찰에서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 모든 건축물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김기남·김양건·오수용 당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특히 소장으로 강등된 김정은 시대 '건축 브레인' 마원춘도 함께하는 한편, 현지에서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인 김정관 육군 중장이 이들을 맞음.
 - 김 제1위원장은 특히 ‘53층 초고층 살림집’ 위에 건설된 상징탑과 대동강 호안공사 등을 칭찬했으며 “건물 외벽을 갖가지 색으로 마감하고 지붕형식도 새롭게 특색있게 시공하니 거리가 천연색 거리가 됐다”고 평가함.

- 북한, 새 ‘지하전동차’ 개발…김정은 열차공장 시찰(10/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가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지하전동차를

개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지시찰에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그는 이번 방문에서 “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다”며 ‘10월10일(당 창건 기념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함.
- 이어 “내가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대단히 중시한 것은,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함.
- 이날 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에는 오수용 당 비서와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아파트 붕괴 책임’ 북한 최부일, 대장으로 다시 진급(10/1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평양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강등됐던 것으로 알려진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이 소장(별 하나)에서 대장(별 넷)으로 다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TV가 19일 방영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 성대히 경축'이라는 제목의 새 기록영화에는 최부일 부장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등장함.
 - 이로써 최부일 부장의 계급은 그간 상장(연도 미상) → 대장(2013년 6월) → 상장(2014년 7월) → 소장(2014년 12월) 등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급상승하다 다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탔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과거 공신들을 복권시켜 권력층의 화합을 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개건 정형 현지요해 및 평양화장품공장·평양시에서 운영하는 이동식물 우리양어장 방문(10.19, 중앙통신)
- 왕재산혁명사적지관리소 창립('75.10.19) 40주년 기념보고회, 10월 19일 진행 및 전승훈(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등 참석(10.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창설 70돌 기념보고회, 10월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0, 중앙통신)
- 김정은 연풍과학자휴양소 현지지도 1주년 기념보고회, 10월 20일 박태성(평안남도당 책임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0.21,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박길녀(女, 강원도 천내군 룡담노동자구)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10.22,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우정희에게 '김정일훈장' 수여(10.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정은) 명령 제00104호. 주체 104 (2015)년 10월 24일 평양】,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예술인들에게 군사칭호를 내려줄데 대하여」 (10.25, 중앙방송·중앙통신)
-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들과 창작가·예술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김정일상' 등 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4호. 등) 모임, 10월 25일 진행 및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전달(10.26, 중앙방송)
- 「청년동맹」 중앙조직 제5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0월 25일 해산시에서 진행 및 '청년동맹' 위원들·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 일꾼 등 참가(10.25, 중앙통신)
- 노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보장된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이라고 선전 및 金日成의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 강조(10.25,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30대 박사, IAEA 설립 국제이론물리센터 회원 등록(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과학원 레이저연구소의 30대 박사 김광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의해 설립된 국제이론물리센터 회원으로 등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과학정상회의> 북한, 아시아한림원연합 가입 재도전(10/20, 연합뉴스)
 - 20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에 따르면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는 20일 오후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이사회를 겸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사회에서는 30개국 소속 34개 회원 기관들이 북한국가과학원의 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북한국가과학원은 작년에 열린 이사회 및 총회에 가입신청서를 냈지만 서류 미비로 이사회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ASSA 회원이 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 북한돈 100억 원 투입(10/21, 조선중앙통신; 10/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미래과학자거리 시찰 사진 배경에 나온 공사 현황판을 분석한 결과, 이 주택단지 건설에 모두 99억 5천940여 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보도함.
 - 총 부지 면적 38만 9천500여㎡, 연 건축 면적 87만 6천750여㎡ 크기의 이 단지에는 살림집(주택) 19개 호동(호수에 따라 나뉘는 건물) 2천584세대, 봉사망(상업편의시설) 17개 호동 153개 단위, 공공건물 11개, 하부시설물 43개가 들어섰고 또 살림집 16개 호동, 공공건물 5개가 개건 보수됐음.
 - 이밖에 대동강변에 자리한 미래과학자거리의 수해 예방을 위해 1천540여m에 달하는 호안공사(침식을 막기 위한 공사)도 진행됐으며 주택단지 건설에는 시멘트 30만3천700여t이 사용됐음.

- 북한, 룡매도 6구역 간척사업 준공(10/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 룡매도 간척지의 6구역 건설이 완공됨으로써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일 수 있는 천수백정보의 새 땅이 생겨나고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보도함.
 - 이날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리응철 간척지건설 지도국장, 황해남도 간척지건설 연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참가함.

다. 경제 상황

- “평화자동차, 남북 합작 끝났지만 전시장 여전히 활기”(10/20, 자유아시아방송)
 - 남북한 합작회사로 출발한 평화자동차의 전시장은 합작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싱가포르 민간단체 조선익스체인지 관계자는 평양 광복동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전시장에 지난해부터 시험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가게, 커피점까지 갖추고 있다고 전하며 “남북한 합작은 수년 전에 끝났지만 전시장은 활기에 차 있었다”고 말함.
 - 전시장 직원은 이 관계자에게 “지난해 평화자동차는 중국과 북한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이용해 남포공장에서 1천6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설명했으며 평화자동차 제품은 1만~3만 달러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판매 차종은 25개인 것으로 전해짐.
- 유엔 “북한 식량 배급, 예년 수준 회복”(10/21, 미국의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10월 식량 배급량이 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1일 보도함.
 - 방송은 21일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배급한 1인당 하루 식량 390g과 비슷한 수준임.
 - 북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인당 하루 식량을 410g 배분하다가 7월 초 310g, 7월 중순 250g으로 크게 줄인 후 9월까지 이 양을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380g으로 대폭 늘렸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캐나다, 북한 신생아와 산모에 24억원 지원(10/2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2014-2015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아동기금(UNICEF)에 모두 215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함.
 - 캐나다 국제개발청(CDIA)은 이 기부금으로 북한의 산모와 신생아, 아동 건강을 위한 3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 지원을 중단했으며,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 몽골 육류와 육가공품 수입 추진(10/2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몽골 매체 '고고 몽골리아'를 인용해 지난 21일 북한이 몽골로부터 육류와 육가공품을 수입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몽골 국가전문감독원의 라드나아세드 원장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몽골 육류와 육가공품 수입에 관심을 보였으며, 라드나아세드 원장과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검역과 위생, 육류 생산능력, 인증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라드나아세드 원장은 북한이 육류 수입에 관심을 보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역과 위생 관련 정보 등을 북한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북한, 중국서 식량 수입 감소...연료 수입은 증가(10/23, NK뉴스)
 - NK뉴스는 23일 중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식량 수입이 7월에 약간 늘었다가 8월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으며 특히 올해 오랜 가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물의 수입이 줄었고, 이는 지난해의 많은 수입량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함.
 - 반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연료는 늘어나 8월 가솔린과 디젤, 등유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는 전함.

- 유엔, 올해 대북 지원사업 예산 중 19%만 확보(10/2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조정국(OCHA)은 올해 유엔 대북 사업을 위해 책정된 1억 1천만여 달러(1천240억여원) 중 19%만 충당됐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식량농업기구(FAO)는 대북사업 예산의 3%, 세계보건기구(WHO)는 7%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유엔인구기금(UNFPA)은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또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P)은 총 예산 840만여 달러(94억여원) 중 47%를 모았고, 세계식량계획(WFP)은 6천900만 달러(778억여원) 중 16%를 충당하는 데 머물렀다고 뉴스는 덧붙임.
 - 최근 수년간 기금 모금 확보율을 보면 2010년 17%, 2011년 40%, 2012년 60%, 2013년 48%, 2014년 42% 등으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뉴스는 전함.

- 평양종합인쇄공장 창립(‘45.10.20) 70주년 기념보고회, 10월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김기남(당 비서) 등 참석(10.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룡라888무역총회사에서 신형 ‘음료정제용 도자기여과봉(규조토 주원료)을 이용한 사이다·단물 등 여과 및 병원성 세균제거·정제효율·실용성·건강보호 효능’ 등 선전(10.19, 중앙통신)
- 北, 10월 20일 2015년 ‘세계통계의 날’ 즈음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결과발표회 진행(10.2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3대혁명전시관 과학기술성과전람관, 활발한 운영 속에 기술교류의 중개자적 역할도 하고 있다고 소개(10.20, 중앙통신)
- ‘당 창건’(10.10) 70주년 기념 전국 의학과학도론회, 10월 20일과 21일 평양에서 진행(10.21, 중앙통신)
-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 ‘국내원료에 의거한 새로운 신발창 생산기술 확립’ 선전(10.21, 중앙통신)
- 北, 청진시 부윤구역에 양어장 건설(10.21, 중앙방송)
- 신경외과학 평양의학과학도론회, 10월 21·22일 리혁(조선의학협회 부위원장)·로영한(조선의학협회 신경외과학위원장/개회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2, 중앙통신)
- 전국 미용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총 주최), 10월 20~22일 평양에서 조선미용기술협회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미용·이발경연’ 등 진행(10.22, 중앙통신)
- 함경남도 함흥시(함흥 과학자 살림집건설 등)·개성시(백화점 개건)·강원도 원산시(자연흐름식 상수도망 공사)·평안남도 순천시(살림집건설) 등 ‘전국 각지 건설사업 추진’ 소개 선전(10.22, 중앙통신)

- 10월 중순 강수량, '전국 평균 강수량은 0.9mm(평균 14.3 mm의 6.3%)로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2008년과 동일, 지난해 4.2mm의 21.4%'라고 자료 공개(10.22,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비공식 장마당도 많아”(10/25, 자유아시아방송)
 -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2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장이 406개로 확인됐다고 밝힘.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특별진급에 인민배우 칭호도 받아”(10/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합동공연을 최상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주체 예술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앞으로도 당의 주체적 문예 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만을 걸어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 형상해 내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임.

- 공훈국가합창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장룡식이 육군 중장으로 특진한 것을 비롯 대좌로 6명, 상좌 62명, 중좌 43명, 소좌 34명, 대위 13명, 상위 42명, 중위 30명, 소위로 12명이 무더기로 군사칭호(계급)가 올라갔으며, 인민예술가 칭호는 현은철, 장길호, 민병철 등 3명, 인민배우는 문일환, 리준 등 2명, 공훈예술가 칭호는 리경덕, 공훈배우 칭호는 지수원, 정광호, 김유경 등 3명에게 수여됨.

-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및 감독들에게 국가표창수여 모임, 10월 20일 태권도위에서 진행(10.20, 중앙통신)
-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토론회, 10월 20일과 21일 강하국(보건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0.21, 중앙통신)
-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15 개막식, 10월 22일 평양체육관에서 최룡해(黨 비서/개막사)·로두철(내각 부총리)·김영훈(체육상)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10월 22일 평양에서 김명근(국제무도경기총 대표)·리용선(국제태권도연맹 총재)·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장)·'라젠드란 발란(제6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0.22, 중앙통신·평양방송)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 관람(10.24,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들, '자체 흡수 능력이 큰 고효수성 수지를 개발하고 농업과 산림부문에 널리 도입하였다'고 선전(10.24,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로버트 킹 특사, “라디오가 대북 정보유입에 가장 중요한 수단”(10/20,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29%의 북한 주민들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며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 킹 특사는 이어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정보 장벽을 허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는 “최근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며 “또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성김 대표, “북한 핵실험 준비징후 없어…유엔결의상 금지”(10/21, 연합뉴스)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0일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핵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지된 만큼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을 휴민트(인적정보)와 테킨트(기술정보)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음.
 - 한편 김 대표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토 진입문제와 관련해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초 개정된 마일 방위지침에는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북한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음.
- 미국, “北과 평화협정 논의 관심 없어…병진노선 포기 전방위 압박”(10/21, 연합뉴스)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할 경우 우선적 초점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음.
 - 김 대표는 또한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다자적 또는 일방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파괴적 정책을 펴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젊은 지도자가 고위 측근들을 숙청하는 습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음.
 - 김 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이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음.
- 미국 의회, ‘북핵 회의론’ 팽배…“대북 정책 비참한 실패”(10/21, 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북정책 청문회를 주최한 코커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참한 실패(subject failure)’라고 비판했음.
 -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곤혹스러운 표정 속에서 “대북 정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더욱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한 것에 우려와 좌절이 있다.”며, “아마도 우리가 (비핵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한편, 회의장에서는 대북 정책 실패의 상당한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는 지적에 김 대표는 “중국이 대북 정책에서 진지하고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제재 이행과 국경관리,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등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음.

- 그는 “현재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원하고 있지만, 일정시점에 가서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이 중국이 희망하는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정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정례 검토”(10/22, 연합뉴스)

-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열리는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존슨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대북 추가제재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테러지원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음.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주한 러대사, “北 평화협정 제안, 주목 할만”...한미와 입장차(10/22,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1일 최근 북한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 요구에 대해 “북한의 제안은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평양의 제안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해 미국 및 한국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음.

- 티모닌 대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른바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6자회담 재개가 전제조건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 우리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가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티모닌 대사는 다만 “러시아는 철저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의 입장은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 의회보고서, “FTA이행, 한국 TPP 가입에 영향”...환율조작 우려(10/19, 연합뉴스)
 -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12개국에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데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8일 작성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했음.
 - 의회조사국은 다만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FTA 이행과 관련해 얼마간의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의회조사국이 TPP 가입과 FTA 이행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의회 내에서 TPP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와 자동차 등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외교 당국의 더 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임.
 - 의회조사국은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초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음.
- ‘마이동풍’ 트럼프, “사실상 공짜로 한국 방어” 되풀이(10/19,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의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미국)는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2만8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했음.

- 이에 앞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재미교포 조지프 최는 지난 12일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트럼프를 향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매년 8억6천100만 달러(한화 약 9천800억 원)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트럼프는 지난 8월과 지난 15일에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고, 대선출마 선언 전인 올해 초에도 여러 번 ‘공짜 보호’ 주장을 해 왔으며, 미국 언론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틀렸음을 여러 번 지적해 왔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
- 디플로매트 등 미국 정치전문 매체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거나 극우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특히 후자 쪽에 무게를 실고 있음.

■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한미정상, 미래로 눈길 돌렸다.”(10/20, 연합뉴스)

-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양연구센터가 주최한 ‘한미동맹에 관한 관점들’ 세미나에서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로 눈길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고 평가했음.
- 그는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미양국이 항상 협력해온 기본 이슈들(fundamental issues)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를 강조할 것”이라며 안보협력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전제했음.
- 그는 한미 양국이 사드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하거나 협의 중인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한일 관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한일 양국간 역사 문제 해결이 양측 국민을 만족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미일, 22~23일 안보현안 실무회의 개최(10/21, 연합뉴스)

-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안보 현안 관련 실무회의를 이달 22~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으며, “3국 국방당국 차장급이 수석대표로 참가해 공동의 안보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실무회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안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임.
-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는 유사시 발생 가능한 표준적 상황-사례를 구성해 한미일 3국간 공동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발생 가능한 표준적 상황-사례’에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하는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3국 정상회의서 북핵 포함된 공동선언 채택될 듯(10/19, 연합뉴스)
 - 한미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한 가운데 11월 초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3국 정상회의 공동문서 형식은 외교적으로 공동성명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동선언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공동문서는 3국 정상회의의 개최 목적인 3국간 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속 문서가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공동문서에는 북핵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구체적으로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핵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북핵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도 공동문서에 표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관련,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정중섭 장관, 중국에 韓中日 연례 행정장관회의 제안(10/19,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베이징에서 리리궈(李立國) 중국 민정부 부장과 장관급 회담을 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례 행정장관 회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행자부가 밝혔다.
 - 이는 세 나라 지방행정 분야의 최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앞으로 행정혁신과 전자정부 분야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임.
 - 정 장관은 또 2009년 이후 연례적으로 열리는 차관급 행자부-민정부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2007년 체결된 교류협력 관련 약정서에 ‘공동체 등 주민자치조직과 관련한 논의를 추가하는 등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음.

- 양측은 앞으로 민정부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중국, “한미관계 발전 기뻐...지역 평화안정에 도움돼야”(10/19,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동맹 강화를 확인한 데 대해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쁘게 바라본다.”면서도 ‘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를 강조했다.

- 또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양호한 상호활동을 하며 부단히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의 합류점을 확대하는 한편 함께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화 대변인의 메시지에는 한미 동맹 강화가 결코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 전략과 같은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는 경계신호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됨.

- 화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기쁘게 바라본다.”면서도 “한일 관계의 발전이 관련 국가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추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도 우회적으로 겨냥했음.

■ 튀전 부부장, “한·중, 신뢰·협력·교류로 가장 좋은 시기 맞아”(10/21,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튀전 부부장은 이날 오전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한국어판 출간기념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문적으로도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성이 크다.”면서 “(양국 관계는) 가장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음.

- 이번 번역 출간을 기한 튀 부부장의 방한은 시 주석이 주창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과 거대한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됨.

- 튀 부부장은 “중국 공산당의 국정이념에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지혜가 녹아있음도 뚜렷하게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몽(中國夢)의 본질은 국가 부강과 민족 부흥, 인민의 행복이며, 이는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한 삶 추구와도 서로 통한다.”고 말했다.

- 중국방대 정치위원, “일본과 센카쿠 충돌 시 한국과 공동투쟁”(10/22, 연합뉴스)
 -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상장(上將·한국군 대장격)인 류야저우(劉亞洲) 국방대학 정치위원이 발표한 논문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했을 때는 대만이나 ‘반일적인’ 한국과 공동투쟁을 모색한다고 기술돼 있음.
 -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센카쿠 충돌에서 패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지만 “중국은 이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으며 퇴로가 없다.”고 논문에서 전망했음.
 - 류 정치위원은 센카쿠 열도가 중일 관계의 초점이 되게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며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를 지니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 교도통신은 류 정치위원의 논문이 중국 공산당이나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으며 여기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의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음.

-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내년에는 일본 개최, 다시 정례화(10/23, 연합뉴스)
 -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릴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내년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연다는 것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3국이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지(닛케이)가 23일 보도했음.
 - 닛케이에 이것이 3국 정상회담을 다시 정례화하고 정상 간 왕래를 늘려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라며 “정상회담의 정례화 재개와 내년 (3국 정상회의) 일본 개최는 3국이 합의할 최저선”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 닛케이에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원자력 시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3국간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구상이 반영될 전망이라고 전했으며, 한·중·일 FTA 교섭 진전, 재해 대응 협력, 환경 문제 해결, 사이버 분야의 신뢰 형성, 관광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고 덧붙였다.

- 中, 6·25 참전 65주년 기념일 조용히 지내(10/25, 연합뉴스)
 - 25일은 중국군이 6·25 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65주년이 된 날이지만 중국 당국이 공식 기념행사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음.
 - 이는 5년 전인 2010년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참전 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참전 60주년 좌담회’를 개최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임.
 - 지난해 10월 25일 기념행사를 치른 주북 중국대사관도 올해는 25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는 발표문을 올리지 않고 있음.
 - 중국이 참전 기념일을 조용히 넘기는 이유는 통상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10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으로도 추정되지만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한중관계도 상당 부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윤병세 장관, “우리 동의 없이 자위대 입국 안 돼”(10/19,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가능성에 대해 “우리 요청이나 동의를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윤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주권 관련 문제는 (해당국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제법도 그렇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윤 장관은 “황 총리 역시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깔고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국제법에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윤 장관은 “이 문제는 수없이 외교, 국방 당국에서 말했고 미국과도 협의해서 잘 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관심이 상당 정도로 미국 방위지침에 반영돼 있고, 일본 국내법에도 많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 “한일정상회담 열리면 정치외교 외에도 폭넓은 논의”(10/19,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꼭 실시하고 싶다.”며 “정치·외교뿐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 NHK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19일 후쿠시마현 나리하마치(櫛葉町)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일한 사이에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그럴수록 정상이 서로 흥금을 열고 회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자민당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드시 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회담에 의욕을 보인 바 있음.
 -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뒤 가진 질의응답 때 “2주 후에는 3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일방위협력’ 日목표는 北미사일 대비·中견제·보통국가화(10/20, 연합뉴스)
 -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등 양국 간 방위협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과의 방위협력에 적극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 중국 견제, 보통국가화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은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정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미일 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데 한국 측 정보가 유용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함께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서 일본인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려면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의 공동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여권에서 강하게 제기돼왔다는 점도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는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됨.
 - 또 한·미·중 사이의 신(新) 3국간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한국을 전통적인 안보협력 틀인 한·미·일 3자 협력 쪽으로 끌어들이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중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국(일본)의 ‘보통국가화’에 한일 방위협력이 도움 되는 측면임.

- 아베 측근, “위안부·야스쿠니, 한·중의 외교 카드화 막자”(10/20, 연합뉴스)
 -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은 일본군 위안부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한국·중국이 외교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그는 “일본의 자세를 중국도 한국도 실제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인데 외교 카드로서 유효하다고 생각하게 해버린 시대가 한동안 이어졌다. 일본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 그는 자신이 ‘총리가 1년에 한 번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서도, “‘외교 정체(停滯)’를 부른다면 떨어진 곳에서 손을 모으는 것(참배의 은유적 표현)도 선택지의 하나다. 정치 카드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후 직접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하는 것이 외교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 日방위상, “한일 안보협력 세계적 차원 확대해야”(10/20,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일 양국이 세계적 차원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음.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한 양국은 안보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 안보 협력은 지역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한국에 도착했으며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관람,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면담 등을 하고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 日방위상, “한국 지배 유효범위는 휴전선 남쪽” 인식 차 극명(10/21, 연합뉴스)

- 21일 니혼케이자이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지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다.”고 말해 지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근거로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된다는 뜻을 반복해 표현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임.
- 아사히(朝日)신문은 ‘지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국이 제시한 회담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애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차대통령, “한일, 올바른 역사인식 토대로 전진해야”(10/2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일 우호친선의 모임 in Seoul’ 행사에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하면서 관계발전을 이뤄왔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선린우호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지만, 양국 국민들은 꾸준한 문화소통과 인적교류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우의를 다져왔다.”며 “그 과정에서 재일민단 동포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튼튼한 가교로서 항상 큰 힘이 돼주셨다.”고 평가했음.
-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행사가 지난 50년간 양국이 함께 이뤄온 성취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50년의 도약을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음.

- 日방위상, “‘휴전선 남쪽 한국영역’ 발언 비공개 합의한 적 없다.”(10/20,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점심을 함께 하고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비공개로 하지는 한국 측과의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한 국방부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됨.
 -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부대가 타국 영토에서 해당국의 요청, 동의를 얻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한국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 한국 영역 내 일본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日정부, “군위안부 문제 끈질긴 협의 방침 변함없어”(10/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한간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장급 협의 등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끈질기게 협의한다는 기존 자세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 주도의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음.
 - 그는 또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언급하거나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기에 대답은 자제하고 싶다.”고 밝혔다.

- 내달 초 한일정상회담 앞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10/23, 연합뉴스)
 - 내달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아베 신조 총리의 방한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NHK가 23일 보도했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이 회담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대 현안으로 꼽히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발표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또는 구상을 두 장관이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됨.

-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위안부 해법 속속 거론…日, 일단 부정(10/24, 연합뉴스)
 - 내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릴 것이 유력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여러 설(說)이 나오고 있어 주목됨.

- 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9선)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의료지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아베 신조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또 23일 한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 주도의 기금을 만들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음.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시아여성기금 후속 사업에 대해 가와무라의 사건일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 주도의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미국, 해군함정 남중국해 파견방침 관련국에 전달(10/19, 연합뉴스)
 -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는 인공섬의 12해리(약 22.2km) 내에 머지않아 미국 해군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동남아시아 관계국에 외교 경로로 이달 전달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 미국 정부는 항행(航行)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 군함을 이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필리핀을 포함해 해당 국가들에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최근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인공섬이 "어떤 국가를 겨냥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이 섬의 무장을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중국의 태도를 일단 지켜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 미국 군함이 파견되는 시기는 유동적으로 보임.
- 중국 해킹방지 약속 이후에도 사이버 공격 시도 여전(10/19, 연합뉴스)
 -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보안기술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시 주석이 방미를 마친 이후 3주 동안 미국의 기술 제약 회사 7곳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으며, 중국과 연계된 이들은 실패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번 공격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통적인 정보수집 이라기보다는 지적 재산권이나 기업 비밀을 빼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월 26일 공격이 시작됐으며, 공격을 받은 회사는 해킹 시도를 감지, 대응에 나서 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이 회사의 창립자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이런 사실을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그들이 사용한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딥 판다(Deep Panda)를 포함한 중국의 다양한 조직이 이번 공격을 시도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남중국해 놓고美中 갈등 악화일로…한국도 선택 기로에(10/19, 연합뉴스)

- 올해 중반부터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미중 양국은 군과 정부의 당국자들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다 최근엔 국가원수도 나선 발언을 내놓으며 점차 일촉즉발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국에도 불똥이 튀어 선택의 기로에 몰리고 있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남중국해 영유권 침해를 용납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나섰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변국들의 동조를 요구하며 해군 함정의 파견으로 직접 행동에 나설 태세임.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미 간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에 까지 불똥이 튀었음.
- 한국으로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미국, 남중국해상 중국 위협 맞서 ‘슈퍼기뢰’ 배치 서둘러 추진(10/20, 연합뉴스)

- 미국이 남중국해상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의 위협 등에 대처하려고 항공기를 통한 원거리 투하용 대형 기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 더내셔널인터레스트(TNI)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퀵스트라이크-EPR’로 불리는 이 기뢰의 장점은 날개를 달아 사거리를 연장했고, 한 발당 2만 달러(2천262만 원)라는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탐지와 소해(掃海)가 쉽지 않고 폭발력이 강해 상대방에 실질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점임.

- 미 군사 전문지인 ‘항공우주전력(Air & Space Power Journal)’에 관련 논문을 기고한 마이클 피트라차 미 공군 대령은 이 활강형 기뢰가 남중국해 분쟁 등의 상황에서 중국의 항공과 창장과 같은 수심이 얇은 강 봉쇄에 ‘상당한 영향(major impact)’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미군, 남중국해 中 견제작전 4가지 방안 놓고 고심(10/21,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미군을 스프래틀리 제도 인공섬 12해리 내에 파견함으로써 특정 해역이나 공중(空中)에 항해·비행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하려고 올해 6월부터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임.
 - 각 방안으로는 인공섬 12해리 내에서 ▲함정 항해 ▲함선을 이용한 조사·훈련 ▲잠수함의 수중 이동 ▲군용기의 상공 통과 등 4가지 방안이 부상했으며 각각의 작전이 낱을 효과나 부작용에 관해 백악관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투함을 보내 항해하도록 하는 것은 그다지 긴장감을 높이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중국이 ‘우리 영해를 미국 군함이 무사히 통과했다’며 자신들이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측은 보고 있음.
 - 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할 수 있으나 작전이 종결된 후 중국 측이 ‘미군이 영해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수용해 나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中, 남중국해 갈등 와중에 美해군 지휘관들에 첫 항모 공개(10/21, 연합뉴스)
 -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 움직임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 해군 일선 지휘관들에게 자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전격 공개했음.
 - 랴오닝호를 방문한 미 해군 지휘관들이 최근의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양측이 이 문제를 틀림없이 집중 논의했을 것”이라며 “양국 해군이 해상에서 조우시 어떻게 오발이나 판단착오 등을 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음.
 - 리 교수는 “해상에서 양국 함정이 조우, 또는 대치할 경우 현장의 복잡한 상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나 이런 양국 지휘관간의 상호소통과 교류활동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남중국해 中인공섬 12해리 안에 함선 파견 결정(10/22, 연합뉴스)
 -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 매립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약 22km) 해역에 함정이나 항공기를 곧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음.

- 미국 정부는 해당 수역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해의 자유가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파견 시기와 장소는 최종 조율중이라고 아사히는 소개했음.
 - 중국은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내세워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걸쳐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하지만 미국, 일본과 동남아의 영유권 갈등 당사국들은 중국의 주장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음.
- 진리쥬 AIB총재, “중국 TPP 가입 희망”(10/22, 연합뉴스)
 - 중국 주도로 창설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진리쥬(金立群) 초대 총재 지명자가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미국의 AIB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22일 신라재경망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진 지명자는 브루킹스연구소 강연을 통해 “중국은 단기필마로라도 AIB 창설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AIB는 여전히 새로운 국가들에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음.
 - 진 지명자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타결된 TPP의 중국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는 미국의 AIB 가입과 중국의 TPP 가입을 맞바꾸지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두 사안 모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맞교환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
 - 그는 이어 “AIB는 결코 세계은행(WB)의 경쟁자가 아니다.”면서 “대부분의 AIB 사무처 직원들이 세계은행과 다자 개발은행 출신들”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 “대규모 외환개입 아니다.”…미 재무부 보고서에 반론(10/23, 연합뉴스)
 - 중국 외환관리국의 왕샤오이(王小飏) 부국장은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울여름에 대규모의 위안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니혼케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음.
 - 왕 부국장은 이날 3분기 누적 외환수지 지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개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 왕 부국장은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이든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면서 “다만 방법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 그는 중국 인민은행이 8월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를 단행한 뒤 “시장에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나왔다.”고 말하고 “외환 공급이 부족했을 때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8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하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 미, 중국 위협 대응해 잠수함에 대함미사일 재장착 추진(10/23, 연합뉴스)
 - 미 해군연구소(USNI)에 따르면 프랭크 켈드웰 미 해군 원자력추진계획국장(대장)은 지난 1997년 퇴역시킨 UGM-84A 하푼 대함 미사일과 같은 대함 미사일을 잠수함에 다시 장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잠수함에 대함미사일을 재장착을 고려하게 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함 미사일 등장으로 예전 누려온 원거리 전력 우위가 사라진데다가 특히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해군의 전력이 증강되는데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 한편, 지난 1977년 미 해군에 처음 실전 배치된 하푼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221kg로 작고, 최고속도도 시속 864km에 그치며 사거리는 200km가 되지 않아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미 해군, “남중국해 인공섬 해역 진입 준비됐다. 명령만 내려라.”(10/23, 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함대의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해군 대장)은 22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인공 섬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이내에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책적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이 인공 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 해역에 진입한다면 이는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 미국 정부는 영유권 분쟁에서 특정 국가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으면서도,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라고 AP는 전했다.
 - 이와 관련해 스위프트 사령관은 국제법상 파도가 낮을 때만 외부에 노출되는 인공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인공섬 규모에 관계없이 미국은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 미·일 관계

- 일본 요코스카기지에 미군 이지스함 추가 배치(10/19, 연합뉴스)

- 일본 가나자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시에 있는 미국 해군 요코스카기지에 19일 이지스함 ‘벤폴드’가 배치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요코스카에는 올해 6월 이지스함 ‘첸설러스빌’이 배치됐으며 이로써 미군이 2017년까지 이곳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의 투입이 완료됐으며, 예정대로 이지스함 3척이 추가되면 미국 해군 제7함대의 거점인 요코스카기지의 함선이 모두 14척으로 늘어남.
- 이들은 이지스함 12척(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보유함 7척)과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으로 구성된다. 이는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연합군이 요코스카기지를 점령한 이후 최다 기록임.
- 미군이 일본에 이지스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인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며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음.

사. 미·러 관계

- 러 군사위성 美 위성 접근 주장에 러, “충돌 위험 없어”(10/21, 연합뉴스)
 -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우주정책연구소(ISP)는 자국 위성 ‘루치(Luch-빛)’가 미국 측 통신위성에 지나치게 접근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우려는 이해하나 충돌이나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말했음.
 - ISP는 또 “루치는 단순한 통신위성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으며 어떤 측면에서도 ‘공격자가 아니다.’라면서 “어떤 위성도 어설픈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나 충돌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공군 출신으로 비영리 기관인 ‘시큐어 월드 재단’의 기술 고문인 브라이언 위든은 이달 초 ‘더 스페이스 리뷰’ 사이트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루치가 지난 6~9일 인텔샷 위성 2기 사이에 자리 잡았고 한때는 두 위성 가운데 하나에 10km 거리까지 접근했다고 지적했음.
 - 위든은 “이 위성은 아직 유엔 우주업무사무국(OOSA)에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임무에도 불확실한 점이 많다.”면서도 루치 위성이 인텔샷 위성의 데이터를 가로챌 가능성에 대한 BBC의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음.
- 미국, 유럽 MD 첫 해상 요격시험 성공…러 반발 예상(10/21, 연합뉴스)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미국 해군 발표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들과의 MD 훈련에 참가한 미 구축함 ‘유에스에스 로스(USS Ross)’가 북대서양 상공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나토 동맹국들이 몇 개의 미사일 목표물을 동시에 요격하는 상황에서의 작전 조율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 훈련에는 MD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스페인 로타 기지에 주둔 중인 4척의 미 해군 구축함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과 나토는 지난 2010년부터 이란 등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MD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임.
- 러시아는 그동안 나토의 유럽 MD 시스템이 자국 핵전력의 상대적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유럽 MD는 미리 관계의 최대 갈등 요소였음.

■ 알 아사드 러시아 방문 싸고 마러 외교 설전(10/22, 연합뉴스)

- 미국은 러시아의 알아사드 환대가 시리아 사태 해결에 방해가 됐다고 비난한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스스로 저질러놓은 중동 지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 BBC에 따르면 에릭 슈츠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21일 러시아와 시리아 간 밀착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러시아가 자국민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알아사드를 환대한 것은 시리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다마스쿠스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목표라는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에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슈츠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푸틴과 알아사드 대통령의 회담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음.
- 그는 “대부분 미국의 근시안적 중동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미국이 의심과 불쾌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음.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푸틴에 IS 근거지 지도 전달(10/23, 연합뉴스)

-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들이 표시된 지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2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살펴봤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군사 정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카터 대통령은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내 공습 작전을 실수 없이 하는데 필요한 IS 근거지 지도 복사본이 필요한지를 물었으며 이후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이 카터에게 전화를 걸어 지도를 전달받고 싶다는 푸틴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도는 카터 대통령이 이끄는 국제문제 연구소 ‘카터 센터’에서 작성됐음.

아. 중·일 관계

- 中외교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봉납에 결연히 반대”(10/20, 연합뉴스)
 -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가을대제를 맞아 일본 각료들이 참배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공물을 봉납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야스쿠니에 대한 공물 봉납은 침략전쟁에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는 제2차 대전 A급 전범들을 향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방법’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이어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철저하게 군국주의와 경계선을 긋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中, “日 단시간에 핵무기보유 가능”...日 “IAEA 사찰 받는다.”(10/21, 연합뉴스)
 -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관장) 회의에서 푸쑹(傅勳) 중국 군축 담당 대사는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음.
 - 푸 대사는 이어 일본이 약 47t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상황을 언급, “왜 일본은 이렇게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은 극히 단시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음.
 - 그러자 사노 도시오(佐野利男) 일본 군축 담당 대사는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며 모든 핵 물질을 감시 하에 두고 있다.”며 “전수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기본 방침으로 하는 일본은 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음.
 - 일본은 폐연료봉 재처리공장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의지만 있으면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로 분류됨.

- 중국 항공모함 1척 더 건조 중…동시에 2척 제작(10/21,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이미 알려진 첫 국산 항공모함 외에 상하이(上海)에서 또 다른 항공모함이 제작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 새로 파악된 항공모함은 상하이(上海) 장난(江南)조선집단 유한책임공사의 항공모함 전용 독에서 선체를 블록으로 나눠 만든 후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하는 공법으로 건조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 베이징의 군사 소식통은 이 항공모함에 라이너모터의 원리를 응용한 전동식 캐터펄트(항공모함 등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항공기를 이륙하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캐터펄트를 도입하면 항공모함에 더 많은 함재기를 대기시킬 수 있을.
 -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새로 만들어지는 항공모함 2척을 모두 하이난(海南)섬 썬야(三亚)의 군항에 배치해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며 주력 전투기인 ‘젠(殲)-15’가 탑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日방위상, 2년 만에 베트남 방문 추진…남중국해 중국 견제 공조(10/23, 연합뉴스)
 -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출석한 뒤 베트남을 방문해 타잉 장관과 회담할 전망이다. 회담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매립 작업을 하고 군사 거점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논할 것으로 보인다.
 - 양측은 특히 방위 장비 취급이나 부대 운용 등 방위 능력을 향상하는 ‘능력구축지원’ 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며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를 멀리서 볼 수 있는 베트남 중부의 캄리인만에 있는 해군 기지 시찰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 일본 방위상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며 이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과 협력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정권 불안정, 인권 침해 심화가능”(10/2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정권이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향후 2-5년이 체제 굳히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보고서 형식으로 ‘김정은 체제 하 북한 지도부의 역동성’(North Korean House of Cards: Leadership Dynamics Under Kim Jong-un)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고스 국장은 “앞으로 2-5년간 김정은 제 1위원장이 그의 정권 내 지도 체제를 완전히 공고히 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분열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특히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 북한 내 인권 침해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정권이 불안정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폭정이 더 악화되거나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나 인권 침해가 커지는 경향이 자연스레 커진다는 설명임.
 - 한편, 고스 국장은 반대로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이 기간에 체제를 굳힌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과 교류도 원활해 질 수 있는 기회도 생겨 결국 ‘경제 개혁’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FAO ‘북한 농촌 어린이 4명 중 1명 저체중’…도시보다 2배 많아(10/22, 미국의 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공개한 ‘2015 세계식량농업백서’에서 북한 농촌의 체중미달인 어린이 비율을 26.7%로 추정했다.
 - 주민 소득이 낮은 저개발국가 1백 23개국 가운데 24째로 높은 수준임.
 - 동아시아 국가들로 범위를 좁히면 동티모르(48%)와 캄보디아(30.6%), 과푸아뉴기니(29%), 라오스(28.9%)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임.
 - 특히 중국 농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최악임.
 - 보고서는 또 북한 농촌에 저체중 어린이가 도시에 비해 2배 정도 많다고 추정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식량농업기구의 안드레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농촌에서 4명 중 1명의 어린이가 저체중인 반면, 도시는 7.6명의 1명 정도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는 농촌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도시에 비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농촌 지역 어린이들의 저체중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은 흔한 일이지만 북한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격차가 다소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경우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농촌 4.4%, 도시 1.3%로, 도 농간 격차가 세 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농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 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5%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 “북한, EU 인권특별대표 10월 방북 초청했으나 불발”(10/23, 연합뉴스)
 - 북한이 이번 달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를 초청했지만 방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음.
 - EU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에게 이번 달에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음.
 - EU 측은 초청 목적이나 양측 간에 협의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했던 전권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 반면 EU 대변인은 “방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음.
 - EU는 “램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북한에서 건설적인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방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측이 새로운 방북 일정을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 109상무, 단속 대상 확대(10/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5대 사법기관 합동으로 구성되어 북한 주민들의 불법영상물 유통과 시청을 집중 단속해온 109상무가 인민보안부 소속에서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음.

- 109상무는 보위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마약단속까지 그 업무영역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 23일 량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09상무를 구성하고 있는 5대 사법기관이란 ‘당,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재판소’라면서 “109상무가 영상물 단속 외에 최근에는 마약단속 활동도 함께 벌리고 있다”고 전했다.
- “지금까지 마약 단속은 주로 인민보안부가 담당해 왔는데 단속 성과가 미미하고 또 단속이 되었다 해도 뇌물만 고이면 어렵지 않게 풀려나곤 했다”고 설명한 소식통은 “이런 실태를 알게 된 최고준엄(김정은)이 보다 강력한 마약 단속의 칼을 빼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소식통은 이어서 “일단 109상무에 걸리면 구성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뇌물을 고여도 풀려나기 어렵다”면서 “그런 이유로 해서 109상무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저승사자로 통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09상무를 장악하는 기관이 보안부에서 보위부로 바뀐 것에 대해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인민보안부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법기관은 보위부의 꼬봉(하급기관)으로 통하고 있다”면서 “보위부가 보안부 소속인 109상무를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최근의 내부 분위기를 이야기했다.
- 소식통은 또 109상무의 최근 활동에 대해 “아랫동네(남한) 영상물 단속과 관련해 의심이 가는 집만 선별적으로 가택수색을 벌렸는데 요즘엔 무차별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주민들 집에 들이닥쳐 살살이 뒤진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북한의 보위부는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손전화 단속을 전담하는 ‘1080상무’의 단속활동도 최근 대폭 강화해서 주민들의 통화내용 감청과 함께 기기 내부의 불법 영상물이나 음악 파일 저장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 북한인권

- 제5회 북한인권 국제영화제, 22일 서울 개막(10/21, 미국의소리)
 - 북한인권 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제5회 북한인권 국제영화제가 내일(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함.

- 북한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서울 대한극장에서 6개국에서 출품한 19편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의 현실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시작됐음.
- EU “북한 인권 결의안, 이달 말 유엔 상정…ICC 회부 담겨야”(10/22, 미국의소리)
 - 유럽 각국은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막한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어 지난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올해도 그런 권고가 반영돼야 한다는 게 오스트리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을 비롯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27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새로 파악한 북한 인도주의 실태, 지난 6월 서울에 개설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스위스 외무부는 현재 유엔에서 새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유엔총회 상정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 에스토니아 역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새 유엔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또 유럽연합이 앞으로도 북한인권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핀란드 외무부는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핀란드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 미 의회, 북한 문제 새로운 해법 모색…인권도 큰 관심(10/22, 미국의소리)
 - 2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회의실에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오랜만에 출석했음.

- 성 김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증인으로 참여했고, 공화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질의했음.
 -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팍 막혀있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구했음.
 -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수 십년 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참한 실패였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북한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거치며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웠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잔인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음.
 - 카딘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안보와 인권이 밀접히 얽혀있으며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음.
 - 이날 청문회에서는 초당파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왔음.
 - 이번 달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핵무기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
 - 가드너 의원은 올해 들어 미국이 제재를 가한 북한 기업과 당국자 수를 꼼꼼히 따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묻기도 했음.
 - 한편, 이날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의원은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통해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락’을 다뤘다며 “21세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때와 마찬가지로 비양심적이다”라고 말했음.
 -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이 유엔의 기본적인 가치를 어기는 인권 유린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인권침해, 현대사회 유래 없을 정도”(10/22, 미국의소리)
-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음.

- 필레이 전 대표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인권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필레이 전 대표는 북한에선 사회계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새로운 인종차별 정책이 존재한다고 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 만 명의 정치범을 풀어주고 성분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하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국제법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 반기문 ‘북한인권상황보고서’ 유엔총회에 제출(10/23, 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유엔 등에 따르면 반 총장이 유엔총회에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았으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른 것임.
 - 보고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 보고서에는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및 이산가족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 내 식량 사정과 보건 문제,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악한 보호 환경,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겼음.
 -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의 그간의 노력 등도 포함됐음.
 -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주목할 만 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음.
 -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만큼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 독일서 첫 북한 인권 영화제(10/23,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에서 올해로 다섯 번째 북한인권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 인권단체 ‘사람’이 영화를 통해 독일인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계획했음.
-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자신이 대북 인권 운동가로 나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영화 ‘크로싱’과 오스트랄리아에서 2000년 제작된 중국 내 탈북자의 삶에 대한 기록영화 ‘삶의 경계에서(On Life’s Border)’ 등을 상영한다고 밝혔음.
 - 슈프리켈스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특히 젊은 독일인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영화제의 목적이라고 말했음.
 - 따라서, 영화 상영과 더불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체험한 탈북자의 강연회 등도 계획했다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강조했다.
 - 영국에 정착한 후 유럽북한인권협회 간사로 활동하는 탈북여성 박지현 씨가 자신이 경험한 인신매매와 강제복송 등 여성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1991년 잠수함을 타고 몰래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면담한 후 북한 정권의 허구성을 깨닫고 북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 씨가 ‘주체사상’을 주제로 강연함.
 - 주체사상은 극심한 식량난과 억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왜 정권에 반항하고 봉기를 일으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전했다.
 - 한편, ‘사람’의 창설부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독일 정책연구소 지오다노브루노재단 (Giordano-Bruno-Stiftung)과 인권단체 헤코(HEKO), 국제엠네스티 독일지부 등이 함께 영화제 개최에 동참한다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덧붙였다.

3. 탈북자

- “탈북자 92%, 북한서 한국드라마 시청”(10/21, 한국경제)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일(현지시간) “탈북자의 92%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봤고, 상당수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음.
 - 킹 특사는 이날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미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미 방송위원회(BBG)의 연구와 탈북자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최근 외부 정보를 전보다 활발히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킹 특사는 “북한은 인터넷이 소수 엘리트 계층에만 허용되고 일반 주민은 채널 조정이 가능한 라디오와 TV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정보 통제가 심한 나라”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와 쇼, 영화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에서 유입된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와 이동형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이런 콘텐츠가 북한 주민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임.
- 킹 특사는 또 “북한 주민의 29%가 해외 라디오 방송을 접한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이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4. 이산가족

- 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환영(10/2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21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미국은 진전된 남북관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투명한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또 과거 미국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 관련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21일 오전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가족 단위의 개별상봉을 시작으로 금강산 상봉 행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 이들은 점심식사와 이어진 단체 상봉을 통해 6시간 동안 애뜻한 혈육의 정을 나눴음.
- 미주한인 이산가족들 ‘눈물만’(10/22, 자유아시아방송)
 - 제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소식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지켜보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한없이 부럽기만 함.
 - 특히 북한에 아직 형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거주 이산가족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이산가족 상봉 현장 뉴스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난 이산가족은 고향 생각에, 북한에

- 두고온 부모 형제 생각에 눈물만 나온다고 하며 말끝을 흐렸음.
-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하거나, 하루빨리 통일이 돼 고향땅도 밟아보고, 형제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며 눈시울을 붉혔음.
 - 이미 북한, 고향을 등진지 60여년이 훌쩍 지났고, 나이도 80이 넘는 이산가족들은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가고 싶은 고향, 그리고 보고 싶은 형제자매들도 못보고 세상을 떠나는 주위 이산가족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고 함.
 -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 내 이산가족들에게도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임.
 - 미국 연방 하원의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이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음.
 - 또 지난 4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바도 있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캐나다, 올해 216만 달러 대북지원(10/20,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국제개발청(CDIA)이 북한의 산모와 신생아, 아동 건강을 위한 3개 지원 사업(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Projects)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캐나다 외교통상부가 지난주 공개한 2014-2015연례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총 215만 5천 달러를 기부했음.
 - 세계식량계획에 지난 3월 160만 달러를 기부했고 같은 달 유엔아동기금에 약

55만3천 달러를 지원했음.

- 이와 관련해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의 대북지원이 영양실조인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집중된다면서 ‘결핵과 폐렴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 ‘2020년까지 전 세계 폐렴 퇴치 계획’, ‘동남아시아 국경지역 지원’ 등 3개 북한 취약계층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영양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에 약 95만 달러를 기부했고, 세계식량계획에는 약 27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75만 3천 달러를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2015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대북지원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캐나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다고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덧붙였다.
 - 이와 함께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준 “누적된 대북제재 결국 성과 낼 것”(10/21, 자유아시아방송)
- 오준 대사는 20일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꾸준한 대북제재가 결국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음.
 - 오 대사는 제재가 초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가해지다보면 교역과 금융활동 등이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은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의 도발 행동이 멈추지 않아 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북한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임.
 - 오 대사는 이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소개했음.
 -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거론해서 망신 주기(naming and shaming)’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러한 접근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임.

- 북한도 유엔의 대북인권 논의에 대해 초기에는 무시했지만 지난해에는 무척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런 반응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임.
- 한편 오 대사는 한반도 통일 등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유엔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8. 북한동향

- 아프가니스탄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 미군 공습 관련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던 미국의 위신이 땅바닥에 처박혀 국제적으로 물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고 조소하며 ‘미국은 국제 테러의 왕초, 최악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 및 ‘인권침해자로서의 심판’ 촉구(10.20, 중앙통신·노동신문/덜미 잡힌 전범자의 잔뼈)
-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금강산), 10월 22일 1차 이산가족 상봉(10.20-22) 종료 및 10월 24일부터 2차 이산가족 상봉(10.24-26) 시작 보도(10.22, 중앙통신·평양방송)
 - 우리측 상봉자들은 남녘의 가족, 친척들과 여러 차례 만나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함께 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